

쌀 생산,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재배면적 축소·직불제 개편·해외원조 확대 등 통해 수급 조절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지만 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419만7,000t으로 전년보다 3.0% 줄어드는 데 그쳤다.

432만7,000t이었던 전년 생산량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401만t이었던 2012년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 78.8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kg으로 10년 사이 21.4%나 급감했으며, 1인당 쌀 소비량이 130.1kg에 달했던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식생활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kg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급감하는 추세지만 국내 생산이 이런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 심화하는 구조"라며 "쌀 소비량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쌀 농가가 쌀 농사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쌀에 치유된 정부의 보조금 정책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쌀값 폭락 사태를 막고 해마다 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투입하는 낭비를 막으려면 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

불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수확기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하지만 지난해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흉년 등의 영향으로 쌀값(수확기 산지 80kg 기준)이 12만9천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차액이 대폭 늘어나 급기야 WTO 농업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9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4,977억원이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WTO 기준에 맞춰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를 AMS 한도인 1조4,900억원으로 깎아야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변동직불금 등의 보조금으로 쌀 농가의 수입을 떠받쳐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올해는 차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수요감소 등으로 계속 쌀값이 추락하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게 되는 손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민 반발 등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 축소 등 근본적 농정혁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값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축소와 직불제 개편, 해외원조 확대 등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지방행정연수원-통일교육원 통일준비역량 강화 업무협약

지방행정연수원과 통일교육원은 27일 연수원 컨퍼런스룸에서 통일 준비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양 기관의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과정 확대, 시설 및 강사 공동활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상호 협력 및 공동활용 등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통일교육원은 27일 연수원 컨퍼런스룸에서 통일준비역량강화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친환경쌀, 제주도 학교급식 800톤 공급

완주 고산농협·순창 태이 친환경영농조합 400톤씩... 851개소 11만 3448명 급식

전북 친환경쌀이 제주도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도 제주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851개소 11만3,448명에 전라북도 친환경쌀이 공급된다.

올해 공급량은 800톤으로 제주도 학교급식 소요량 1,600톤 중 전북산 친환경쌀이 50%를 차지하게 된다.

도내 공급선정업체는 2개소로 완주 고산농협과 순창 태이 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업체당 400톤씩 공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은 3차에 걸친 평가 후 총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제주도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전국 23개 업체(충북1, 충남3, 전북 6, 전남 13)가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자 예비후보 선정은 14명 심사위원의 심도 높은 서류 심사를 거쳐 8개 업체(충남1, 전북3, 전남4)가 선정됐고, 예비후보 선정 업체 대상으로 지난 1월 16~18일까지 현장평가를 가졌다.

최종 품평회에서는 30여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밥맛, 씹는 촉감, 쌀알 모양 등을 비교 평가해 4개 업체(전북 2, 충남 1, 전남 2)가 선정, 2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공급되는 친환경쌀은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현지 공급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매월 2회 40~45톤씩 차량배수송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 공급이 이뤄진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알리고 친환경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주도 초등학교에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성검사, 납품 조건 준수, 위생검사 등 납품 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모든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제주도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 신청

전북도, 4월 14일까지

전북도는 농촌지역에 부존돼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지 '2018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 시행 전 사업공모(전년도), 심사, 선정,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 및 성

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 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 단위 향토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에 4년간 30억 원(지부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의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도, 정읍시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 연장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27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에 대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읍시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발생 방역대 이동금지 해제시까지 발생농장 3km내는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3km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승인을 한다.

단 소, 염소, 사슴에 대해서는 3월 5일까지 농장 간 이동 금지를 연장하고 사전검사 후 도내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만을 허용하며, 돼지는 사전검사 후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

하가 허용된다.

또한 가축시장은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시까지 폐쇄되며,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서도 소독전담관을 파견하고 축산차량 출입시 소독시설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구제역은 지난 13일 충북 보은 발생 이후 신고가 없지만, 심각 단계의 방역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후속조치를 준수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와 축사내외부 및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 용동 육용종계 농가서 AI 의심축 발생

익산 용동면 소재 육용종계 농가에서 27일 AI 의심축이 신고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신고농가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현지 확인결과, 폐사축 증가와 신경증상 등의 AI 의심증상과 간이지관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발생농가 기준 반경 10km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조치 및 임상예찰,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금강호 등 철새도래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의 이동이 많은 시기로 확산방지 및 종기종식을 위해 신고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 등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 '안전한 도민 소식' 발간 격월·웹진 형태

전북도는 지역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안전한 도민 소식'을 발간한다.

소식지는 이달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월로 웹진 형태로 발간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안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전문가, 단체, 현장요원 등 정책고객 1,000명에게 소식지를 전해서 도민안전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 그리

고 재난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소식지를 통하여 지역안전문제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삼고 도민 안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이 소식지가 도와 도민 안전생활 지킴이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